

한국GM 군산공장 해법 '묘수' 없나

'떡튀 방지' 꼼꼼한 실사 필요 · "끌려다닐 이유 없다" ... 정치권, 군산 고용재난지역 지정 추진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리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GM은 우리 정부에 50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산은 유상증자)과 세제혜택을 요구하며 이달 말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일단 지원에 앞서 실사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철수를 막아야겠지만,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 결국 정부 돈만 받은 뒤 철수하는 '떡튀 우려'도 있어 묘수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안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이번 기회에 고비용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도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GM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3만1명이며, 2·3차 협력업체 등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동자를 모두 합치면 15만7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산업은행은 GM에 대한 의혹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GM이 호주에서 정부지원만 받고 철수한 사례가 있는 만큼 '떡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GM은 호주 정부로부터 2001년부터 12년간 1조7000억원의 지원을 받고도 2013년 공장을 철수했다.

정치권에서는 GM군산공장이 사실상 거의 가동되지 않는 공장이었고, 군산의 GM 협력업체들이 현대·기아 등 다른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GM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GM은 2013~2016년 한국GM에서 연 5% 인력의 차입금 이자로 4620억원을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부담해온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2014~2016년의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 8580억원이 연구개발(R&D)비로 지출된 과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TF 홍영표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국GM 대책 TF, 협력업체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글로벌GM이 한국GM에 부품을 비싼 가격에 팔고 완성차를 싸게 사가며 적자 경영구조를 만들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은 고금리 대출과 납품 가격,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홍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협 군산지회장은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부가 군산공장, 한국지협을 회생시킬 수 있게 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GM 자본 특성상 정부에 계속 지원 요청만 하고 나중에 철수한다는 말을 다시 할 수 없으니 정부나 산업은행이 철저하게 경영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법적인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이어 "매출 대비 제조원가, 고금리 이자 문제 등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적으로 군산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금융상의 특별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신용보증, 고용·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대책 TF'를 맡고 있는 홍영표 위원장은 이날 "한국GM 부실화의 원인은 글로벌GM의 돈만 버는 전략에 한국GM이 희생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부품 가격이 30~40% 높다가 엄청난 기술 자문료를 미국에 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글로벌GM은) 2조 7000억원의 본사 부채의 이자율을 5%까지 높여서 한국GM의 부실을 가속화했다"며 "한때는 미국이 파견한 임직원이 300명에 달했는데, 전 세계 어느 다국적 기업도 현지에 이렇게 많이 파견하지는 않는다. 고비용도 이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GM과 논의하겠지만 GM 본사만 배 불리는 문제에 대해 한국GM이 해법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노조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양보와 희생을 한다고 한다"며 "TF는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 빠른 시일 내에 한국GM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다스 수사팀 중앙지검 하나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의 최종 결론은 서울중앙지검 몫이 됐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고 나머지 숙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이날 2008년 다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120억원의 비자금 등은 직원 개인 횡령금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호영 전 특검 수사 결과와 같은 판단이다. '비주기 수사'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특검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정 전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정황 다수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특검이 발견하지 못했던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의혹이 대표적이다. 파악한 비자금 규모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해당 자금이 다스 실소유주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함께 동부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용처 역시 확인, 관련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은씨 몫이었던 매각 대금 15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용한 정황이 파악될 경우 의혹은 한꺼풀 벗겨지게 되는 셈이다.

이후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철단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수사팀 부팅장을 맡았던 노만식 검사 등 4명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데 청와대 등이 관여했다는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몸집을 더욱 불리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검사들이 합류하고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음에 따라 수사 속도 역시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이미 관련자들이 제출한 다수의 자수서 진술, 유의 미한 압수물 등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다.

동부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될 부분과 합쳐진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文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엔 결연히 대응"

"WTO 제소 ·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통해... 수입규제 확대에 종합적 대책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상무부가 철강·전자·태양광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전자·태양광·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

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박주현·이상돈·장정숙 "바른미래 교섭단체 불참"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강력 반대했던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19일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추진하는 교섭단체 등록에 연서와 날인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이상 불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라"고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자신들에 대한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해 왔지만 비례대표로서 민주평화당에 합류하지 못했다. 앞서 유승민 공동대표는 안철수 당시 대표가 비례대표 출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출당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